

액티비즘과 쟁점 진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

조성대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 국문요약 |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을 갈등대체 대 갈등확대라는 상반된 가설을 정당 활동가의 영향력을 추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시민권 쟁점이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 쟁점 차원을 형성해 1930년대 뉴딜이 표상했던 계급 균열을 대체하며 지배적인 갈등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경제복지 균열이 그대로 유지된 채 갈등확대로 정당 체계를 편성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각 균열 쟁점의 진화 과정에서 정당 활동가들의 액티비즘이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경험분석 결과는 경제복지 쟁점 차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념적 편성을 보이며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 쟁점 차원은 1980년대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 아래 이념적 편성을 본격화해 갈등확대를 통해 오늘날 미국 정치의 분극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당 액티비즘은 다소 극단적인 쟁점 주창 활동의 원천이었으며,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문화 쟁점 차원에서의 정당 액티비즘은 오늘날 미국 정치의 분극화를 직접적으로 추동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 미국 정치, 분극화, 갈등대체, 갈등확대, 정당 활동가, 액티비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2A1A01026242).

I. 머리말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연구는 미국정치연구회가 2008년 단행본으로 펴낸 『미국정치의 분열과 통합: 엘리트, 유권자, 이슈 양극화와 정치과정』과 그 전후의 논문들로 정점을 보이다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물론 2000년대 이후 미국정치연구회에서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행본을 발행해왔으나 해당 선거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룰 뿐이었다. 물론 경제, 인종, 낙태, 의료보험, 이민 등의 주요 쟁점들이 분극화와 무관하지 않고 몇몇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정치 분극화를 다루고 있지만, 미국 정치의 분극화 문제는 현재 한국의 정치학계의 관심에서 다소 비껴서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물들은 대부분 정당 재편성 이론(예, Schattschneider 1960; Sundquist 1983)에 근거하여 엘리트 수준이나 유권자 수준에서 정당 분극화의 원인과 결과를 진단해왔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남부 백인들의 정당지지 변화에 따른 의회의 분극화(가상준 2006; 최준영 2007), 1980년대 이후 사회문화갈등의 등장과 정당일체감의 재편성(정진민 외 2005; 조성대 2007), 2000년대 후반 티파티의 등장과 정당 정치의 변화(김준석 2014; 유성진·정진민 2011),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이후의 정당 분극화 현상에 대한 연구(유성진 2012; 정진민 2013)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이 분극화의 정치사적 변화에 대한 귀납적 설명만을 제공할 뿐 연역적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이후 경제복지와 사회문화의 이차원 정책 공간에서 정당 분극화가 갈등대체에 따른 정당 재편성을 보인 것인지(Abramowitz 1994; Carmines and Stimson 1989; Miller and Schofield 2008; Schofield et al. 2003), 혹은 갈등확대의 결과인지(Layman and Carsey 2002; Layman, Carsey, Green, Herrera, Cooperman 2010)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전자의 경우 1930년대 뉴딜연합은 인종과 시민권 갈등의 인위적 축소를 바탕으로 가능했고, 1960년대 이후 사회문화갈등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이념적 재편성은 계급투표의 축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는 1970년대 이미 경제적 차원에서 계급적 좌우 균열로 편성된 토대

위에서 사회문화 차원으로 갈등이 확대된 결과로 본다. 따라서 대비되는 두 접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연구는 정당 분극화가 엘리트에서 대중으로의 전달 체계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갈등 쟁점의 등장이 먼저 연방 엘리트(의원)들 수준의 분극화를 일으켰고, 이어서 대중의 여론을 분극화시켰다는 것이다(Carmines and Stimson 1989; Hetherington 2001; Zaller 1992).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중요한 행위자를 빠뜨리고 있다. 즉 분극화를 유도하는 쟁점과 엘리트의 반응 사이, 엘리트 단서의 전달과 대중의 인지 사이에 정치 활동가(political activists)라는 주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Aldrich 1983; Bailey, Munnolo, and Noel 2012; Bawn, Cohen, Karol, Masket, Noel, and Zaller 2012). 정치 활동가들은 일반 정당 지지자나 유권자들보다 다소 극단적이 견해를 지니며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동시에 견인하고자 하나의 쟁점 분야에서 주창 활동을 하거나 보다 일반적인 분야에서 선거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당에 원심력(centrifugal force)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정당으로 하여금 다운스(Downs 1957)의 중위 투표자 지점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입장을 취하게 만든다. 즉 정당은 엘리트, 활동가, 지지자의 연합체(coalition)이며 정당 분극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탐구는 엘리트와 유권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 엘리트, 활동가, 지지자, 유권자 간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 활동가의 액티비즘이 유권자들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탐구는 정당의 반-중앙적(non-centrist) 입장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그 동안의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서너 개의 시점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정진민·손병권·곽진영 2005; 정진민 2013; 김준석 2014). 혹은 시계열적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가상준 2006), 매개 선거 혹은 10년 주기별로 데이터를 따로 분석했을 뿐이다(조성대 2007). 따라서 교차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의 경험분석 모형에서 다룬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2012년까지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을 갈등대체 대 갈등확대에 대한 경험적 검증, 그리고 정당 활동가들의 액티비즘이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미국선거연구의 교차시계열 데이터 중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사용한다. 물론 쟁점에 따라서 19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한 경우도 있으나 고용/승진에서의 적극적 보상정책, 성소수자 쟁점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설문항이 1992년부터 시작된 관계로 주된 분석은 1992년 대선 이후에 맞춘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장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 글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한다. 갈등대체에 따른 정당 재편성 이론과 그 대안인 갈등확대 연구를 설명하고 이를 검증하는 프레임인 ‘쟁점 진화’ 접근을 소개한다. 아울러 정당 액티비즘의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 분야로 이어져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II장에서는 정당 분극화를 분석하는 데이터와 변수를 소개하고 갈등대체 혹은 확대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에 미친 정당 활동가의 영향력을 검증할 경험 분석 모형에 대해 소개한다. IV장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책 쟁점을 경제복지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구분한 뒤 각 쟁점 진화 과정을 통해 갈등의 성격과 규모, 이념적 편성 여부들을 설명한다. V장은 정당 활동가의 액티비즘이 포함된 경제복지와 사회문화 쟁점 변수의 효과를 정당일체감과 대선 후보 투표선택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한다. VI장은 이론, 가설과 경험적 발견을 요약하고 이러한 연구 틀이 한국 정치학 연구에 갖는 함의를 토론한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와 이론적 배경

1. 갈등대체 vs. 갈등확대

정책의 이념적·역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정당 체계의 재편에 대한 이해는 키이(Key 1959)와 샤프트슈나이더(Schattschneider 1960)의 연구 이후 갈등대체(conflict displacement)에 의한 정당 재편성론으로 확장되며 일반화되어 왔다. 안정기에 정당의 대중적 연합과 그에 따라 구조화된 정당 체계는 하나의 지배적인 갈등 쟁점 혹은 균열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물론 정치 세계는 복수의 갈등 쟁점으로

구성되나 지배적인 갈등 쟁점 외의 다른 쟁점들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거나 하위 갈등으로 기능한다. 정당도 갈등 구조를 일차원에 국한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지니는데, 새로운 쟁점으로서의 갈등의 확산은 현재의 정치 연합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armines and Stimson 1989). 특히 미국처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가 오랫동안 양당제를 형성해온 환경에서 “적들의 연합(coalition of enemies)”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당 지도자들은 하나의 지배적인 갈등을 중심으로 넓고 자칫 깨지기 쉬운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Miller and Schofield 2003, 249).

새로운 갈등 쟁점이 부상하면, 다수 연합(majority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는 정당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 자칫 새로운 갈등이 지닌 원심력에 의해 지금껏 유지되어왔던 정치 연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갈등이 사회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당 및 정치인들은 새로운 갈등에 편성하며 이념적으로 극화되어 가면서 새로운 대중 정치 연합을 건설하려한다. 이 때 소수당은 특정 정책에서 불만을 지니거나 소외를 느낀 다수당 지지자들을 유인해 새로운 승리 연합을 구축할 수도 있다. 다수당도 새로운 갈등이 지닌 원심력에 지지자들을 뺏기지 않으려 그 대척점에 위치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들은 이전의 지배적 갈등 쟁점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거나 중양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새로운 갈등이 낳은 균열이 이전의 지배 균열을 대체할 경우 정당 재편성이 발생한다(Abramowitz and Saunders 1998). 특히, 총체적인 재편성은 하나의 갈등에서 양립 불가능한 다른 갈등으로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배 쟁점이 야기하는 갈등 규모가 억제되고 새로운 갈등 쟁점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여 정당 차원에서 새로운 다수와 소수 연합을 구분할 때 발생한다(Schattschneider 1960, 60-64). 즉 정당 재편성은 “하나의 갈등이 다른 갈등에 의해 대체된”결과이며 정당 체계는 이 지배적 갈등구조에 따라 경쟁하며 새로운 안정기로 진입한다는 것이다(Sundquist 1983, 13).

20세기 미국 정당사에서 1960년대 사회문화 쟁점의 부상과 1930년대에 형성되었던 뉴딜 갈등구조의 대체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뉴딜 연합이 계급 중심의 경제 균열에 토대를 두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뉴딜 기간

동안 1860년대의 정당 재편성의 주요 원인이자 이후 미국 정당 정치를 주도해왔던 인종 쟁점이 정치적으로 부상되지 않았었는데, 민주당 내부 북부의 진보주의자들과 남부의 분리주의자들 간의 정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종 문제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동북부 지역으로의 흑인 이민의 증가와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열광적 지지는 도시 지역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민권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Karol 2009). 특히 뉴딜 연합의 한 축이었던 노동조합원들이 밀집한 지역구와 진보적인 활동가 집단들은 민주당 내에서 큰 압력으로 작용했다. 공화당 역시 뉴딜 기간 동안 노예제를 폐지했던 링컨의 정당답게 인종 문제에 있어 자유주의적 입장을 지녔고 그 입장은 196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부상한 당내 보수주의 운동과 보수주의 활동가들의 증가는 1960년대 공화당을 민권법에 대한 반대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1964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골드워터(Barry Goldwater)가 승리하면서 당의 보수화가 완료된 듯했다(최준영 2007; Feinstein and Schickler 2008). 급기야 1964~65년의 시민권 및 투표권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분극화를 야기하며 인종과 시민권 쟁점을 지배적인 갈등으로 부상시켰다. 문화정치가 계급정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정진민·손병권·곽진영 2005).

샤츠슈나이더 이후 갈등대체에 따른 정당 재편성론은 중대선거나 재편성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지 않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Campbell 2006, 360-61 참조) 종합적인 프레임을 갖추며 일반화된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많은 연구는 인종 혹은 시민권 쟁점으로 인한 1960년대의 정당 재편성이 1980년대 범죄, 사형제, 공중안전, 여성의 지위 등의 문제, 1990년대 종교, 낙태, 흑인 및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보상책, 동성애,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문제, 그리고 2000년대 낙태, 동성결혼, 소수자 지원, 줄기세포 연구, 불법 이민 문제 등의 사회 혹은 문화 쟁점과 결합하면서 이념 균열구조로 미국 정치를 분극화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예, Shaffer and Claggett 1995; Stonecash 2006; 조성대 2007). 미국은 “공화당 주(red states)와 민주당 주(blue states)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사이엔 사회문화적 골이 깊게 파여 있다”는 지적이나(Gibbs 2004), 미국이 과연 “문화 전쟁 중인가”는 질문(Fiorina 2004)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풀리지 않은 의문은 하나의 갈등의 확대가 반드시 다른 갈등의 축소를 가져와야 하는가이다. 1960년대 시민권과 인종 쟁점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갈등이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문화 쟁점과 어우러져 하나의 지배적인 갈등으로 미국 정치를 분극화했다는 점을 인정하다하더라도 뉴딜 시기부터 주요 갈등으로 작용했던 계급 균열이 소멸되었거나 축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대공황과 뉴딜 시기의 재분배와 복지의 연합이 1960년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복지 프로그램으로 계승되었고, 다시 1980년대 레이건의 레이저노믹스 신자유주의로 번복되면서 계급 균열을 유지시켰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몇몇 연구들은 1970년대 초반 인종과 시민권 쟁점이 극화될 때만하더라도 낙태, 여성, 성소수자 등의 문화 쟁점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1990년대 이후 인종-시민권 쟁점과 같은 차원에서 갈등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는데, 이와 동시에 경제복지 쟁점 또한 뉴딜의 계급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1970년대 이후 줄곧 분극화된 갈등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Layman and Carsey 2002; Layman et al. 2010). 국내의 한 연구도 1972년까지 계급 투표의 쇠퇴가 명료했지만, 1976년 대선 이래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선택에서 계급 투표가 부활했으며, 특히 유권자의 소득 수준과 공화당 투표 사이에 강한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김진하 2004). 즉 계급 균열은 약화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무정형의 등락을 반복하거나 연합의 재정립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Hout, Brooks, and Manza 1995; Hout and Manza 1999).

결국 경제복지 갈등으로 인한 분극화의 지속, 계급 투표의 부활 등의 주장은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이 하나의 지배적인 갈등을 따라 편성되었다기보다 복수의 갈등이 축소 및 확대를 반복한 결과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승리 연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은 내부에 다양한 이익의 연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동거하는 이익들 간의 상대적인 힘의 균형 혹은 쟁점의 민감성과 현저함(salience)에 따라 특정한 갈등의 규모가 정해지며, 결국 갈등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와 확대의 기복현상을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는 이러한 갈등 대체 혹은 확대의 훌륭한 경험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1960년대 등장한 사회문화 갈등이 계급 갈등을 대체하

며 지배적인 갈등구조로 기능하고 있는지, 혹은 경제복지 갈등이 1970년대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두 개의 갈등이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관련 쟁점들이 자아내는 갈등 구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카민스와 스티imson이 제시한 “쟁점 진화(issue evolution)”모형은 적절한 분석 기법을 제공한다(Carmines and Stimson 1989). 쟁점 진화 모형은 기존의 정당 체계를 가로질러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쟁점들에 주목한다. 즉 유권자가 새로운 쟁점이 유발한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당 재편을 일으키는 과정을 키이(Key 1959)가 말한 “세속적 재편성”과정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추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균열 쟁점을 따라 대중적 분극화가 발생하는 순간”이라고 정의되는 중대 순간(critical moment) 이후 장기간 동안 엘리트와 대중이 이념적으로 정렬하며 극화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Carmines and Stimson 1989, 902).¹⁾ 즉 1990년대 이후 경제복지와 사회문화 쟁점에 대해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적 편성을 시계열을 따라 분석함으로써 분극화가 갈등대체의 경로로 전개되었는지 혹은 갈등확대의 경로를 따랐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쟁점 진화와 정치적 액티비즘

또 하나의 쟁점은 분극화가 전개되는 인과관계의 사슬에 관한 것이다. 정치 분극화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분극화는 엘리트에서 대중으로라는 흐름을 갖는다(Carmines and Stimson 1989; Heterington 2001; Keele and Stimson 2005; Zaller 1992). 즉 갈등을 내포한 쟁점이 부상하면 엘리트, 특히 연방의원들 사이에서 명료하고 분극화된 입장이 정리되고 그 단서(cue)가 대중으로 전달되어 대중의 정당일체감을 강화하거나 약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중은 단순히 엘리트로

1) 한 연구(Feinstein and Schickler 2008, 2)는 이를 “역동적 성장 모형(dynamic growth model)”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부터 단서를 부여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의 정당일체감은 현저한 쟁점에 반응하여 자신의 이념에 걸맞은 정렬을 시도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조성대 2007).

주목해야할 점은 엘리트와 대중의 정치적 분극화 사이에 정치 활동가(political activists)의 액티비즘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엘리트와 대중의 정책 입장의 변화가 정치 활동가에 의해 매개되는 ‘엘리트 → 정치 활동가 → 대중’이라는 채널을 따라 발생한다고 본다(Adams 1997; Carmines and Stimson 1989; Miller and Schofield 2003; Schofield, Miller, and Martin 2003). 정당은 그 본질상 특정 목적을 위해 정부를 장악하고 활용하려는 이익집단과 활동가들의 연합체이다(Bawn et al. 2012, 571). 여기서 활동가 집단은 하나 혹은 복수의 쟁점에서 일반 지지자나 유권자들보다 다소 극단적 견해를 지니며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을 일컫는다(Aldrich 1983). 이들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유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다 득표에 필요한 정책과 자원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활동가들은 자원봉사, 정치자금 모금, 여론 조성, 유권자나 지지자 동원을 통해 경선과 본선에서 후보의 승리를 돕는 대가로 정책적 혜택의 배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직접 대중들에게 호소해 지지자로 동원하는데 열을 올리게 된다. 결국 정당과 후보자들은 극단적인 주창으로 원심력을 불어넣는 활동가 집단과 중위 투표자로 수렴을 보이는 일반 유권자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Bailey et al. 2012; Schofield and Miller 2007).

몇몇 연구들은 정치 분극화 과정에서 정치 혹은 정당 활동가들의 액티비즘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시민권 쟁점에 대한 한 연구는 1960년대 시민권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뒤바뀐 배경에 1940년대부터 민주당의 주(州) 정당에서 현실했던 풀뿌리 활동가들의 역할이 있었음에 주목했다. 주로 진보주의자, 노조원, 흑인, 그리고 유대인 활동가들의 연합으로 형성된 민주당 활동가 집단이 1950년대 남부 주 이외의 지역의 주 정당 차원에서 시민권을 옹호하는 강령 채택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인 결과로 1960년대 민주당이 연방 차원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채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Feinstein and Schickler 2008).

1980년대 이후의 사회문화 쟁점의 극화에 대한 연구 또한 정치 활동가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문제를 다룬 한 연구는 1950년대까지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던 여성들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이념적 편성을 보이며 민주당과 일체감을 지니게 진화했다고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의 축적과 경제적 독립이 문화적 차원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정치적 표출을 가능하게 했는데, 특히 여성주의자적 관점을 지닌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 태도를 지니며 민주당과 일체감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이후 낙태와 평등권 등에서의 활동가들의 등장과 맞물리며 정당 간의 분극화를 더욱 촉진시켰다(Gillion, Ladd, and Meredith 2014).

낙태 쟁점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정당 간 분극화를 촉진시킨 대표적인 쟁점이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여성운동은 동등한 권리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는 크지 않았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나올 무렵만 하더라도 낙태 쟁점을 둘러싼 양당 간의 갈등은 재정 지원이라는 계층적 성격을 띠 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낙태 쟁점은 여성의 권리 대 태아의 생명권 문제로 변모했고 종교적 신념 체계까지 가미되면서 계층적 쟁점에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가치 갈등으로 전환되었다. 1989년 전국여성단체(NOW)와 전국낙태권행동연맹(NARAL)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동등권수정안과 낙태권을 지지하는 워싱턴 행진을 진행한 이후 정당 간의 대치가 격화되었고, 2003년 부시 대통령의 준분만낙태금지법 서명 전후 여야 및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이 극화되었다거나(김민정 2010), 1970-80년대 생명권옹호(pro-life) 활동가들이 공화당 경선에서 낙태찬성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캠페인을 펼친 결과 1990년대부터 의회 내에서 도덕적 보수주의자들이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을 대체할 수 있었다는(Adams 1997) 지적들은 이 분야에서 정치 활동가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성소수자 쟁점을 둘러싼 정당 분극화도 낙태 쟁점의 그것과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1974년 동성애자권리 법안이 최초로 제안되었을 당시만하더라도 단 한명의 공동발의자가 없었을 만큼 민주당 엘리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쟁점을 피해가려는 기색이 역력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평판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동성애 활동가들은 1960년대 이래 흑인 민권 운동가들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며 대중 동원

과 선거자금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서현진 2003) 특히 최대의 성소수자 권리 단체인 HRC(Human Rights Campaign)가 성소수자 쟁점에 대한 의원들의 이념 점수를 공개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몰아주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차별반대법, 군내동성애자 허용, 결혼 보호법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점차 진보화되었고, 이에 따라 분극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Karol 2012).

2000년대 이후 티파티(TEA Party)의 결성과 활동은 경제복지 차원의 갈등구조가 지속되었거나 부활했을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지방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티파티는 작은 정부, 정부재정지출 축소, 감세 등을 목표로 하는 운동집단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폐지, 오바마케어 철폐, 불법이민자에 대한 규제, 동성결혼 반대 등의 쟁점 주창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총선에서 하원 지역구별 티파티 활동가들의 수는 천 명당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을 8%까지 끌어올렸다(Bailey et al. 2012). 또 다른 연구는 이 중간선거에서 티파티는 상원 14명, 하원 170, 주지사 8명을 지지후보로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유성진 · 정진민 2011).

III. 경험분석 모형과 변수의 조작화

기존 연구로부터 도출한 이 글의 문제의식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인종 및 시민권 쟁점이 자아낸 갈등으로부터 시작해 1980년대 이후 낙태, 여성 및 성소수자 쟁점과 연결되어 구축된 사회문화 쟁점이 1990년대 이후에도 미국 정치에서 지배적 갈등구조를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1930년대 뉴딜연합이 낳았고 1970년대에도 여전히 극화되었다고 주장되는 경제복지 갈등구조가 과연 그 규모면에서 축소되었는지, 혹은 여전히 분극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 진화 과정에서 액티비즘의 영향력을 유권자의 정치정향이나 투표 선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몇 가지 쟁점 - 예, 사회복지, 인종, 문화, 낙태 - 들에서 정치 활동가들의 액티비즘이 의회 내 엘리트들의 입장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입장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었지만, 개별 쟁점에 대한 분석에 머물렀을 뿐 정당체제나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한 경우는 드물었다. 아울러 사용한 자료가 집합 수준의 데이터에 머물렀을 뿐이다(예, Layman et al. 2010; Gillion et al. 2014). 즉 정치 활동가가 단순히 엘리트로부터 단서를 부여받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쟁점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을 동원하는 능동적 행위자라는 점을 미시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 활동가들이 정당이나 지지자들에게 원심력을 불어넣는다는 면에서 그들의 액티비즘의 영향력을 쟁점 영역에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쟁점 진화 모형은 경험 분석의 출발점이다. 우선 각 정책 쟁점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평균 입장 간의 시계열별 차이값은 쟁점이 자아내는 갈등의 규모와 더불어 갈등의 진화 과정을 진단하게 해줄 것이다. 여기에 정치 활동가들의 쟁점별 평균값으로 조작되는 정당 액티비즘의 정렬 추이는 각 쟁점을 둘러싼 이념적 편성 여부를 진단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액티비즘에 따른 쟁점 주창이 유권자들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쟁점이 정당 분극화에 미친 효과를 진단하게 해줄 것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정당 지지자들의 정책 태도만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쟁점 진화의 과정을 밝힌 것과는 달리 이 논문은 정당 활동가들의 정책 태도와 함께 고려함으로써 쟁점 진화의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고려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의 대상은 1992년 이후 2012년까지 미국 대선을 사례로 삼았다. 물론 쟁점 조사 기간이 허용할 경우 이전 시기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데이터는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를 누적 데이터(cumulative data, release version 20150514)를 사용했다.

쟁점 진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정부서비스지출(government service spending, VCF0839), 국민의료보험(government health insurance, VCF0806), 일자리/소득_정부역할(guaranteed jobs and income, VCF0809), 고용/ 승진의 적극적 보상(affirmative action in hiring/promotion VCF0867a), 흑인구제(aids to black, VCF0830), 양성 평등(women equal role, VCF0834)²⁾, 낙태(abortion, VCF0837과 VCF0838)³⁾, 동성애자

2) 양성평등 쟁점은 2012년에 설문되지 않아서 일반 이념을 묻은 변수를 2008년 여성평등

차별 금지법(law to protect homosexuals against discrimination, VCF0876a), 군내 동성애자 지위(strength of position on gays in military, VCF0877a), 그리고 성경권위(authority of the Bible, VCF0850)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이다. 첫 변수부터 여성평등 변수까지는 7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각각 3점(성경권위), 4점(낙태), 5점(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군내 동성애자 지위)으로 측정되었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모든 쟁점을 0(진보)부터 1(보수)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들로 변환했다. 아쉽게도 고용/승진_적극보상, 동성애 차별 금지법, 군내 동성애자 지위, 성경권위 변수는 1992년 ANES부터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을 살펴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의 초점을 1990년대 이후로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그밖에 다른 변수는 트렌드 추적이 가능한 연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패턴을 분석한다.

쟁점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개별 쟁점에 대한 정당 지지자들과 정당 활동가들의 입장의 평균값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2차원으로 통제된 요인분석을 통해 각 정책 쟁점들을 경제복지와 사회문화의 쟁점 차원으로 분류한 뒤 각 쟁점 차원의 갈등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 쟁점 차원이 경제복지 쟁점 차원보다 더 큰 규모의 갈등 폭을 보이는지, 경제복지 쟁점 차원은 갈등이 대체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축소되었는지 진단하게 해줄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액티비즘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여정도를 설문한 다섯 개의 변수들을 6점 척도로 구성한 변수(VCF0723)를 활용하여 3점 이상을 정치 활동가 집단으로 정의했다.⁴⁾ 3점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정치 활동가의 유의미한

평균값에 맞추어 사용했다. 물론 쟁점 진화 과정을 시계열로 살펴보는 작업에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으나 요인분석에 이 변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한 조치였다.

- 3) 낙태 쟁점의 경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낙태 일반에 대한 관점을 설문한 변수(VCF0837)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의 범위를 설문한 변수(VCF0838)가 있는데 전자에서 1972년과 1976년을 후자에게 덧붙여서 낙태 변수로 사용했다.
- 4) 설문들은 타인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가(VCF0717), 모임이나 집회에 참여했는가(VCF0718),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일했는가(VCF0719), 후보의 버튼이나 스티커를 부착했는가(VCF0720), 정당이나 후보에게 돈을 기부했는가(VCF0721)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관찰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4점 이상의 빈도가 5.5%에 불과해 이를 다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구분할 경우 유의미한 관찰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 정치 액티비즘은 전체 빈도의 13.4%로 나타났다. 정치 액티비즘은 다시 응답자의 정당일체감 변수를 이용하여 민주당 액티비즘과 공화당 액티비즘으로 구분했는데, 변수의 빈도는 각각 6.8%와 5.9%로 나타났다. 각 정책 쟁점에서 이들의 평균값이 일반 정당 지지자들의 입장을 평균값보다 일관되게 극단적일 때 이념적 편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경험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정당 액티비즘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정향이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응답자의 정치정향에는 7점 척도의 정당일체감 변수(VCF0301)가 활용되었다. 투표선택은 대선 후보 선택 변수(0. 민주당 후보, 1. 공화당 후보, VCF0704)를 사용했다. 쟁점에 있어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력은 방향이론(directional theory, Rabinowitz and Macdonald 1989)에서 제기하는 효용 함수를 적용했다. 방향이론은 정책 투표에서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유권자의 효용 산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파악한다. 즉 유권자들은 자신이 이념적 중도에서 얼마나 진보 혹은 보수적인지 판단한 후, 후보자를 평가할 때도 후보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하기보다 자신과 동일한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선명한 입장을 제시하는지 등으로 효용을 계산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후보자가 극단적인 위치를 점할수록 유리하다. 물론 이러한 이념적 극단성에 기초한 효용 함수는 전통적인 공간이론의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조성대 2015, 7장 참조). 그러나 유권자에게 최대 효용을 부여하는 지점이 이념적 극단이라는 알고리즘은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력을 측정하기엔 적절할 수 있다. 즉 정당 활동가들이 정책 쟁점에서 다소 극단적인 입장을 보이며 유권자들을 자신의 정책적 입장으로 유인해 이를 무기로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당 액티비즘이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효용은 정책의 강도로 측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정당 활동가들의 영향력을 실질적인 효용 함수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공화당 액티비즘에게 갖는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_i(RA) = \sum_{j=1}^2 \beta_j (V_{ij} - N_j)(RA_j - N_j) \quad (1)$$

U 는 효용을 의미한다, RA 는 정책 쟁점에 대한 공화당 액티비즘으로 각 정책 쟁점에 대한 공화당 활동가들의 평균값을 활용했다. 각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활동가의 입장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이다. V 는 응답자의 정책 쟁점에 대한 입장을, N 은 중립점(0,0)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i 는 응답자를 그리고 j 는 요인분석의 결과로 축소된 경제복지 쟁점 차원과 사회문화 쟁점 차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용 함수 $U(RA)$ 는 응답자 i 가 정책 쟁점에서 공화당 액티비즘에 대해 갖는 효용을 나타낸다. 응답자가 민주당 액티비즘으로부터 받는 효용 - UDA - 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회귀분석에 포함될 효용 변수는 $U(RA)-UDA$ 로 민주당 액티비즘 대비 공화당 액티비즘의 상대적인 효용으로 조작된다. 정당일체감이나 투표선택과 긍정적 관계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 몇 가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는데, 3점 척도의 회고 및 전망적 경제 평가(1. 나빠짐, 3. 그대로임, 5. 좋아짐), 인종(백인, 흑인, 히스패닉, 기타), 정치적 남부(0. 기타, 1. 남부) 변수들이 사용된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성(0. 남성, 1. 여성), 연령(1. 17~24, 2. 25~34, 3. 35~44, 4. 45~54, 5. 55~64, 6. 65~74, 7. 75 이상), 교육 수준(1. 8학년 이하, 2. 9~12학년, 3. 12학년 졸업, 4. 직업 교육, 5. 졸업장 없이 대학 재학, 6. 대졸 이상), 소득 수준(1. 0~16%, 2. 17~33%, 3. 34~67%, 4. 68~95%, 5. 96% 이상)도 함께 사용된다.

IV. 1990년대 이후 정책 쟁점의 진화 과정

미국 정치의 분극화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930년대 뉴딜 연합까지 거슬러 올라가 갈등 쟁점들이 어떠한 진화 경로를 겪어왔는지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유의미한 설문항을 지니고 있는 ANES 데이터는 고작해야 1972년부터이고 특히 고용/승진에 대한 적극적 보상 정책,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군내 동성애자 지위, 성경권위 변수들은 기껏해야 1992년까지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뿐이

다. 그런데 이들 변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사회문화 갈등의 핵심 요인들이다. 이를 감안하고 미국 정치의 갈등구조를 공화·민주 양당의 활동가와 지지자(정당 일체자)의 정책 쟁점에 대한 판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각 정책 쟁점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요인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2차원으로 제한해 구축된 공간에서 정부서비스지출, 국민의료보험,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고용/승진_적극보상, 흑인구제 변수는 1차원에, 양성 평등, 낙태, 동성애자차별금지법, 군내동성애자지위, 성경권위 변수는 2차원에 적재되어 있다. 고용/승진의 적극보상과 흑인구제 변수가 경제복지 쟁점에 포함된 이유는 이 변수들이 시장과 국가에서 경제적 보상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정책 쟁점의 성격을 고려해 전자를 경제복지 쟁점 차원으로 그리고 후자를 사회문화 쟁점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Cronbach의 α 값은 경제복지 쟁점 차원의 분류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한다. 아울러 사회문화 쟁점 차원의 변수들의 정렬도 비록 통계적 신뢰성이 약하지만 부정할 정도는 아님을 보여 준다. 이제 각 차원별로 정책 쟁점의 진화과정을 살펴보자.

<표 1> 정책 쟁점의 요인분석 결과

	차원 1	차원 2
정부서비스지출	0.68	
국민의료보험	0.64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0.76	
고용/승진_적극보상	0.58	
흑인구제	0.73	
양성 평등		0.50
낙태		0.72
동성애자차별금지법		0.54
군내 동성애자 지위		0.58
성경권위		0.75
설명된 분산 (%)	27.13	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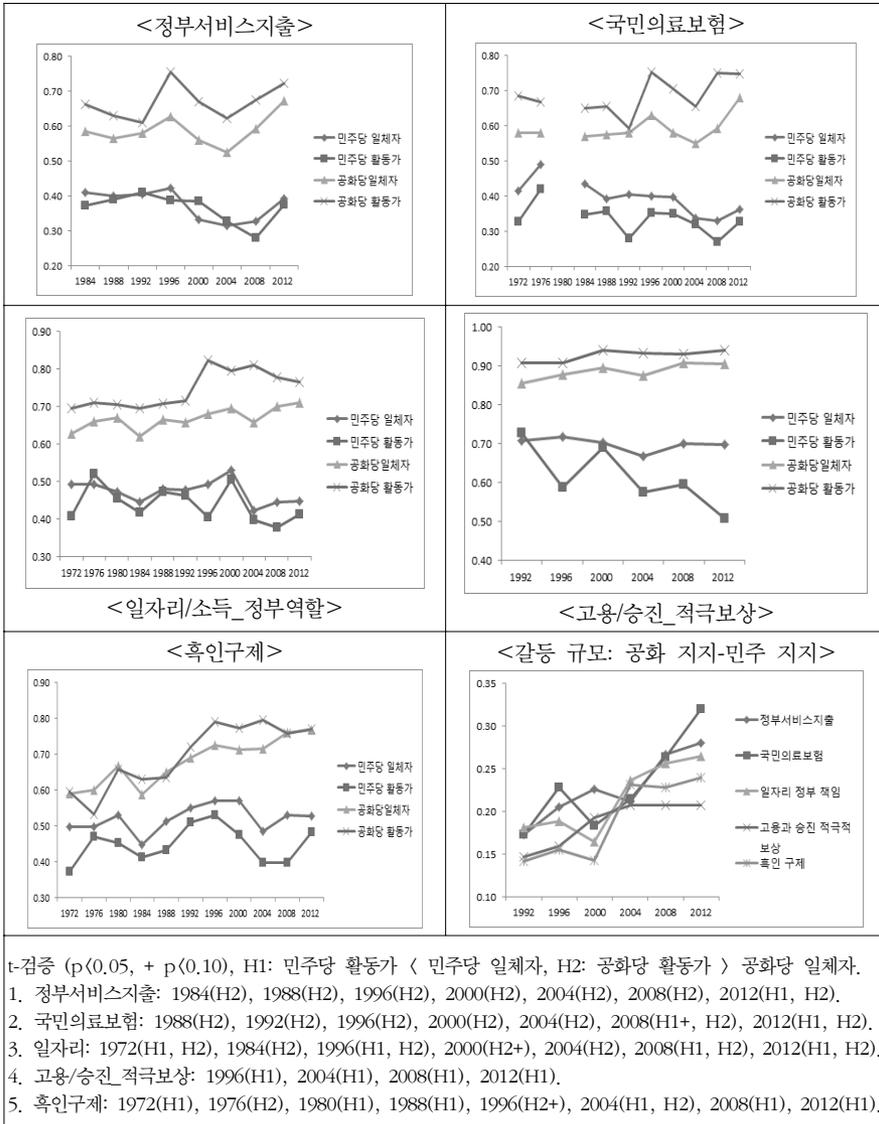
※ 요인 추출 방법: Varimax, Cronbach's α : 차원 1 = 0.75, 차원 2 = 0.66

<도표 1>은 경제복지 차원에 포함된 정책 쟁점들의 진화 과정인데,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정당별 활동가와 지지자들의 평균이 안정적인 진보-보수의 좌우 대칭을 보이며 진화하고 있다. 정부서비스지출, 국민의료보험, 그리고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변수는 대체로 중도(0.5)를 기준으로 공화당 활동가와 지지자들의 평균값이 보수적인 위치에 있는 반면, 민주당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의 평균값은 진보적인 위치에 있다. 고용/승진_적극보상 변수와 흑인구제 변수도 기준점이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좌우 대칭의 진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 초반까지 추적이 가능한 세 변수 - 국민의료보험,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흑인구제 - 가 일관된 이념적 편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하면 뉴딜 시기 형성된 경제복지의 갈등구조가 이념적 편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2000년대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양당 지지자 사이의 이념 거리를 갈등 규모라고 정의했을 때, 경제복지 차원의 갈등은 1990년대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서비스지출, 국민의료보험,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변수의 경우 갈등 규모는 1992년 0.15~0.18에서 2008년과 2012년 0.26~0.32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08년과 2012년 사이의 증가 추세는 티파티의 영향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고용/승진_적극보상과 흑인구제 변수의 갈등 규모도 그 폭은 작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셋째,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활동가들의 평균값은 정당 지지자들의 그것보다 이념적으로 극단적이다. 이는 각 정책 쟁점의 이념적 편성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정당의 액티비즘과 지지자들의 입장 간의 차이가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t-검증에서 정부서비스지출, 국민의료보험,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변수의 경우 공화당 쪽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시민권적 복지 영역인 고용/승진_적극보상이나 흑인구제 변수에서는 민주당 쪽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각 정당의 액티비즘이 쟁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활발함을 보여준다.

<도표 1> 경제복지 쟁점들의 진화 과정



<도표 2>는 사회문화 쟁점들의 진화 과정이다. 경제복지 쟁점들의 진화 과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드러진 차이 중 하나는 미

국 사회가 여성과 성소수자 쟁점에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진화해왔다는 점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입장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성평등 문제에서 1972년 평균 0.42에서 2012년 0.20으로, 동성애자차별금지법 쟁점에서는 1988년 0.54에서 2012년 0.23으로, 그리고 군대 동성애자 지위 쟁점에서도 1992년 0.58에서 2012년 0.18로 진보적으로 진화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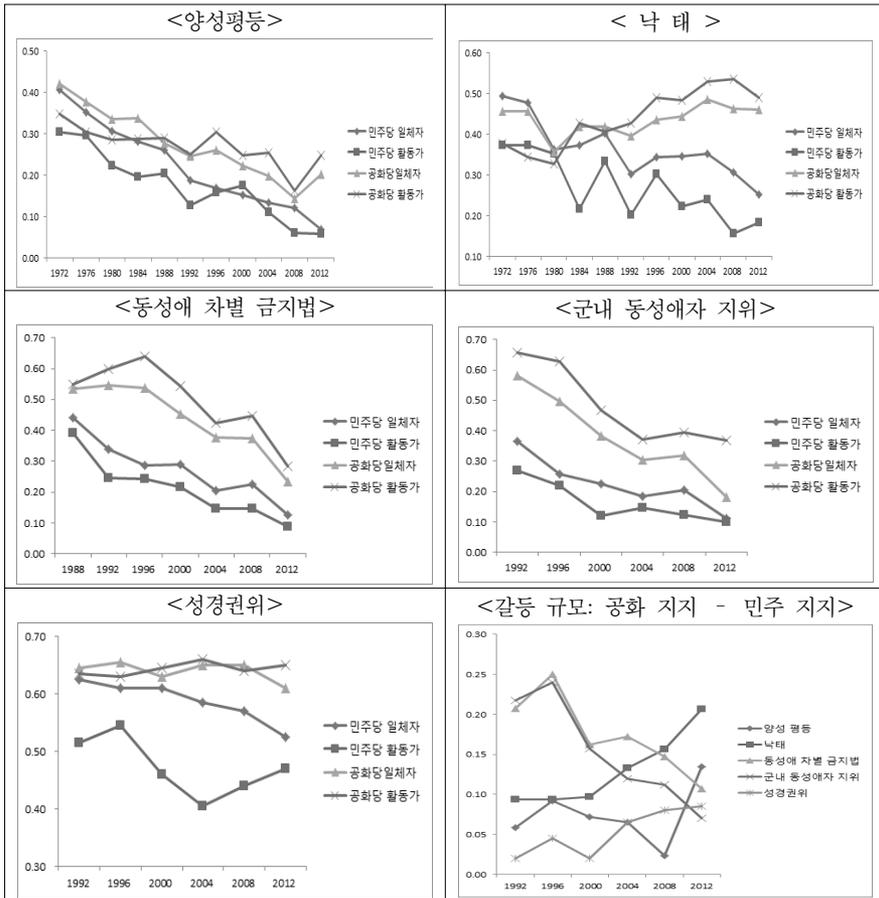
둘째, 갈등의 규모면에서 성소수자인권 변수들과 낙태 및 성경권위 변수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양당 지지자들의 평균값 차이를 비교하면, 낙태 쟁점의 갈등 규모는 1992년 0.09에서 2012년 0.21로 확대되었다. 성경권위 변수도 1992년 0.02에서 2012년 0.09로 확대되었다. 이에 반해 동성애자차별금지법이나 군내동성애자지위 변수의 갈등 규모는 1992년 0.21과 0.22에서 2012년 각각 0.11과 0.07로 축소되었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어가는 반면, 이념화된 종교 교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낙태 쟁점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셋째, 경제복지 쟁점들과는 다르게 사회문화 쟁점들은 1980년대 이후 이념적 편성이 본격화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낙태 쟁점의 경우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활동가들이 민주당 활동가들보다 진보적이었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진보적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며 공화당 활동가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부터 오늘과 같은 이념적 편성을 완성해 진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험 발견이 기존 연구(Adams 1997; Layman et al. 2010)를 재확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양성평등 쟁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데, 정당 소속과 상관없이 양당 활동가들이 지지자들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가 1980년대 말부터 공화당 활동가들이 보수화되면서 이념적 편성을 보이기 시작해 정당을 분극화시키고 있다. 즉 1980년대 낙태와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쟁점 등에서 활동가들의 이념적 편성이 사회문화 영역에서 정당 분극화를 야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5) 특히 성소수자 쟁점에서의 진보적 흐름은 1995년 안보관련 정부부처에 동성애자 근무를 허용하는 대통령령, 1998년 동성애자 고용차별 금지 대통령령, 2003년 연방대법원 동성애 금지법 위헌 판결에 이어 2015년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활동가와 지지자의 입장의 이념적 편성에 대한 t-검증에서 민주당 활동가와 지지자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양성평등이나 성소수자, 그리고 종교 쟁점들이 진보적인 액티비즘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도표 2> 사회문화 쟁점들의 진화 과정



t-검증 ($p < 0.05$, + $p < 0.10$), H1: 민주당 활동가 < 민주당 일체자, H2: 공화당 활동가 > 공화당 일체자.

1. 양성평등: 1972(H1, H2), 1976(H1+, H2), 1984(H1, H2), 1992(H1), **2004(H2), 2008(H1), 2012(H1, H2)**.
2. 낙태: 1972(H1, H2), 1976(H1, H2), 1984(H1), 1992(H1), 2000(H1), 2004(H1), 2008(H1), 2012(H1).
3. 동성애 차별금지법: 1992(H1), 1996(H2), 2008(H1, H2), 2012 (H2).
4. 군내 동성애자 지위: 1992(H1), 1996(H2), 2000(H1), 2008(H1, H2), 2012(H2).
5. 성경권위: 1992(H1), 2000(H1), 2004(H1), 2008(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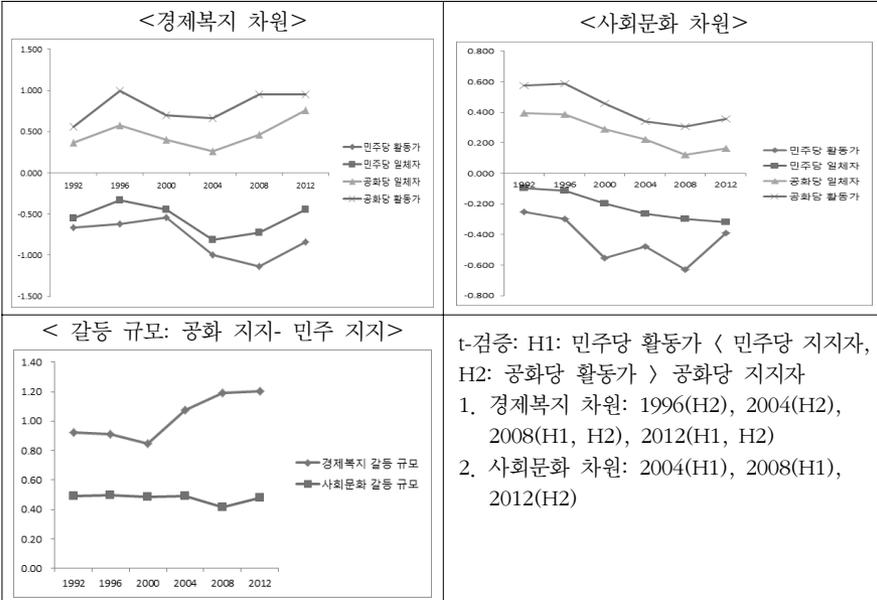
다섯째, 정당 지지자들 간의 극화 정도를 고려했을 때, 사회문화 쟁점들의 갈등 규모는 경제복지 쟁점의 그것에 비해 다소 작다. 따라서 1960년대 시민권 쟁점이 1980년대 이후 하나의 사회문화 갈등 차원으로 발전하여 경제복지 갈등 차원을 대체하며 미국 정치의 분극화의 주범이 되었다는 주장은 최소한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갈등이 유지되면서 사회문화갈등이 확대되어왔다는 기존 연구(Layman and Carsey 2002; Layman et al. 2010)와도 다소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경제복지 차원의 갈등은 1970년대부터 2012년 현재까지도 오히려 그 규모가 조금씩 확대되며 진화해 정당 분극화에 기여했고, 사회문화 쟁점의 이념적 편성과 진화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를 이 차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V. 이차원 정당 분극화와 정당 액티비즘

<도표 3>은 <표 1>의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요인값을 각 정당별 활동가와 지지자의 평균값으로 구분해 1990년대 이후의 진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복지 쟁점 차원과 사회문화 쟁점 차원 모두 중도(0. 0)를 기준으로 가설이 예측하는 방향으로 이념적 편성을 보이고 있다. 시기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경제복지 차원) 혹은 전체적으로 진보적 진화 양상(사회문화 차원)을 보이지만 공화당 액티비즘은 공화당 지지자들을 보수적으로 견인하고 있고 민주당 액티비즘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진보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경제복지 쟁점 차원에서 공화당 활동가와 지지자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이 대부분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갖춘 가운데, 2008년부터는 민주당 활동가와 지지자 간의 t-검증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복지 쟁점 차원은 갈등 규모가 확실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 배경에 티파티의 액티비즘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에 반해, 사회문화 쟁점 차원의 갈등 규모는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안정된 추세를 보이며, t-검증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2004년과 2008년 민주당 사례에서 그리고 2008년 공화당 사례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진화의 패턴이 다른 두 종류의 쟁점 - 낙태와 종교 그리고 양성평등과

〈도표 3〉 이차원 요인분석과 쟁점 진화



성소수자 쟁점 - 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제 정당 활동가의 쟁점 주창 활동이 유권자의 정치정향과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표 2>는 III장의 <공식 1>을 적용해 조작한 쟁점 변수를 통제 변수들과 함께 응답자의 정치정향인 정당일체감과 대선 투표선택에 각각 회귀한 결과이다. 정당일체감이 7점 척도의 변수여서 일반적인 일반 다중 회귀를 사용했고,⁶⁾ 투표선택은 이변량 변수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했다.

우선 회귀 모형의 성과를 보여주는 (유사)R-제곱은 정당일체감 모형과 투표선택 모형에서 각각 0.40와 0.67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통제 변수들의 효과부터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변수들은 정당일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성일수록,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공화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록 통제

6) 순서로지스틱(ordered logistic) 회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다중회귀를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적인 유의미성이 약하지만 정당 정체성이 성별을 가르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여성주의의 발전, 그에 따른 정당일체감의 편성을 연결한 젠더 재편성의 발전이론(Inglehart and Norris 2000)의 적실성을 엿보게 한다. 아울러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의 유의미성은 전통적인 정당일체감의 계층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변수 중 소득 수준 변수만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득일수록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인종 변수도 흑인, 히스패닉일수록 민주당을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거나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경향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회고적 및 전망적 경제 평가는 피오리나(Fiorina 1981)가 예측한대로 과거 경제 상태와 같은 단기적인 쟁점이 정당일체감의 단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투표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에 대한 미래 전망도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지니며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당 액티비즘이 반영된 쟁점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자. 교차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경제복지 쟁점과 사회문화 쟁점의 두 변수를 각 대선별로 회귀시켜 교호 효과(interaction effects)를 검증했다(Brambor and Clark 2006). 그런데 회귀분석에서 교호 변수의 회귀계수의 효과와 유의미성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변수들의 한계 효과를 계산해 통계적 유의미성과 회귀계수의 크기를 검토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 쟁점 변수들의 효과를 정당일체감에 갖는 관계부터 살펴보자. 주효과를 고려했을 때, 경제복지와 사회문화의 두 쟁점 변수는 정당일체감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공화당 액티비즘에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공화당일체감을 강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선 기간별로 변수의 교호작용을 고려했을 때, 2000년까지는 경제복지 정책의 한계효과가 앞섰는데 이후 사회문화 정책에 선두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낙태 및 여성, 성소수자, 2000년대 들어 생명공학과 종교 문제들로 이어지는 사회문화 갈등이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정향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2년 사회문화 쟁점 변수의 한계효과는 0.75로 가장 작았던 1996년에 비해 1.5배에 달한다.

〈표 2〉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의 회귀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 (민주 ~ 공화) 다중 회귀 분석		투표선택 (공화/민주)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계수	한계효과	회귀계수	한계효과
정당일체감	-		0.90 (0.05)**	
회고적 경제 평가	0.24 (0.02)**		0.48 (0.06)**	
전망적 경제 평가	0.07 (0.02)**		0.11 (0.06)**	
성	-0.10 (0.05)+		-0.05 (0.15)	
연령	-0.008 (0.02)		-0.004 (0.05)	
교육 수준	0.12 (0.12)**		0.09 (0.06)	
소득 수준	0.09 (0.03)**		0.15 (0.08)*	
인종_흑인	-0.98 (0.09)**		-2.36 (0.42)**	
_히스패닉	-0.29 (0.11)**		-0.62 (0.28)*	
_기타	-0.16 (0.13)		-0.05 (0.38)	
정치적 남부	0.05 (0.05)		-0.17 (0.16)	
년도				
(1996)	-0.34 (0.09)**		-0.55 (0.22)*	
(2000)	-0.14 (0.10)		0.41 (0.25)	
(2004)	0.22 (0.09)*		0.31 (0.25)	
(2008)	0.53 (0.13)**		1.32 (0.37)**	
(2012)	0.03 (0.09)		0.47 (0.24)*	
경제복지 쟁점	0.62 (0.04)**		0.53 (0.13)**	
× 1992		0.62 (0.04)**		0.04 (0.01)**
× 1996	-0.08 (0.06)	0.54 (0.04)**	0.14 (0.21)	0.05 (0.01)**
× 2000	0.04 (0.07)	0.66 (0.07)**	-0.41 (0.24)+	0.01 (0.02)
× 2004	-0.17 (0.06)**	0.45 (0.04)**	0.12 (0.24)	0.05 (0.12)**
× 2008	-0.16 (0.06)**	0.46 (0.04)**	-0.12 (0.23)	0.03 (0.01)*
× 2012	-0.13 (0.05)**	0.49 (0.03)**	0.40 (0.17)	0.06 (0.01)**

	정당일체감 (민주 ~ 공화) 다중 회귀 분석		투표선택 (공화/민주) 로지스틱 회귀 분석	
	회귀계수	한계효과	회귀계수	한계효과
사회문화 쟁점	0.54 (0.06)**		1.15 (0.17)**	
× 1992		0.54 (0.06)**		0.08 (0.01)**
× 1996	-0.05 (0.09)	0.50 (0.07)**	-0.37 (0.23)	0.06 (0.01)**
× 2000	0.07 (0.10)	0.62 (0.08)**	-0.26 (0.27)	0.07 (0.02)**
× 2004	0.13 (0.10)	0.67 (0.08)**	-0.08 (0.29)	0.08 (0.02)**
× 2008	0.18 (0.14)	0.72 (0.13)**	-0.08 (0.43)	0.09 (0.03)**
× 2012	0.21 (0.09)*	0.75 (0.06)**	0.84 (0.32)**	0.13 (0.01)**
상수	2.91 (0.18)**		-5.82 (0.50)**	
(Pseudo) R2	0.40		0.67	
N	4,742		3,488	

가중치: VCF0011z(2012 full sample).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 p < 0.01, * p < 0.05, + p < 0.10.

둘째, 쟁점 변수들이 투표선택에 갖는 효과는 조금 다르다. 우선 한계효과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주효과나 교호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사회문화 쟁점 변수의 효과가 경제복지 정책의 효과보다 조금 더 크다. 즉 응답자들이 사회문화 쟁점 분야에서 정당 액티비즘이 부여하는 효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쟁점 변수는 2004년까지 유사한 효과를 지니다 그 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복지 쟁점 변수는 2000년 대선을 제외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효과가 상당한 안정세를 보인다. 다만 2012년 한계 효과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티파티 활동의 효과로 보인다. 2012년 사회문화 쟁점 변수의 한계효과도 갑작스레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한다면, 2000년대 후반 미국 정치의 분극화는 두 차원에서의 갈등이 서서히 확대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 현상을 갈등대체 대 갈등확대, 그리고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시민권 쟁점이 과연 1980년대 이후 낙태, 여성, 동성애, 종교 등의 쟁점들과 연결되면서 1930년대 뉴딜이 표상했던 계급 균열을 대체했는지 아니면 계급 균열은 그대로 유지된 채 사회문화 균열이 이념적 편성 과정을 거치며 전체적으로 갈등이 확장된 모습을 보이는지, 각 균열 쟁점의 진화 과정에서 정당 액티비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력은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구체적인 질문들이었다.

경험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극화 과정에서 정책 쟁점의 진화 경로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상에서 정부서비스지출, 국민의료보험, 일자리/소득_정부역할 고용/승진_적극보상, 흑인구제 변수들이 경제복지 쟁점 차원을 형성하는 한편, 양성 평등, 낙태,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군내 동성애자 지위, 성경권위 변수는 사회문화 쟁점 차원을 형성했다.

둘째, 경제복지 쟁점 차원은 이미 1970년대부터 정당 지지자들이 이념적 편성을 갖추며 진화해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쟁점의 갈등 규모는 확장 추세에 있어 사회문화 쟁점 차원에 의한 갈등대체 가설을 부인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 쟁점은 낙태 및 양성평등 쟁점과 같이 1980년대에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적 편성을 유도하며 경제복지 쟁점과 더불어 미국 정치의 분극화에 기여해왔다. 다만 쟁점의 갈등 규모는 경제복지 쟁점보다 근소하게 작았으나 유권자들의 정치 정향이나 투표선택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당 액티비즘의 역할에 관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당 활동가들은 각 정책 쟁점과 요인분석으로 축소된 쟁점 차원에서 대체로 일반 지지자들보다 극단적인 이념 정향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이념적 편성을 유인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복지 영역에 있어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관련 있는 쟁점에서는 공화당 액티비즘이,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민주당 액티비즘이 돋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문화 영역에 있어서 낙태와 중

교 쟁점에서는 민주당 액티비즘이, 그리고 성소수자 쟁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액티비즘 모두 정당의 분극화를 유도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전통적으로 각 정당이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쟁점에서의 액티비즘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둘째, 방향이론의 효용함수를 적용해 정당 액티비즘의 영향력이 반영된 쟁점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경제복지 쟁점이나 사회문화 쟁점 모두 응답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등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았던 사회문화 쟁점 변수가 경제복지 쟁점 변수보다 두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나마 더 컸다는 점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를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치정향이나 투표선택에서 두 쟁점 차원의 한계효과가 2012년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사회문화 쟁점의 증가 추세가 훨씬 가파르다는 점은 200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의 분극화가 주로 사회문화 쟁점이 자아내는 갈등에 기초했음을 추론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문제의식과 분석과정 및 결과는 한국 정치 연구에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민주화 이후 반공이념을 둘러싼 안보 갈등의 지배적 위치를 인정하고 있다(강원택 2005; 이내영 2011; 정진민 2003). 동시에 몇몇 연구들은 대안의 갈등구조를 탐색하거나 새로운 이념 갈등의 등장을 진단하기도 했다. 경제적인 좌우의 계급 갈등(조성대 2015), 탈물질주의 대 근대주의(김욱 2010; 마인섭 2004), 자유지상주의 대 권위주의(장훈 2004) 등의 대한 탐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역적 이론에 기초해 한국 사회의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이념적 편성을 분석하기보다 귀납적인 분석이나 설명에 머물렀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글의 이론과 경험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민주화 이후 갈등적 쟁점의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다. 몇몇 주제들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들이 연구 성과로 제시는 되고 있지만, 갈등 쟁점의 진화와 정당의 이념적 편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차시계열 데이터를 통한 분석 작업은 한국의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것이다. 둘째, 정치적 액티비즘에 대한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인 팬클럽이나 당원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성격을 진단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정치 활동가 집단과 정당 체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무하다.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셈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6. “미국 의회의 양극화를 통해 본 미국정치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211-236.
- 강원택. 2003. “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5-30.
- 김민정. 2010. “미국 낙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정치학회보』 44집 4호: 265-286.
- 김 옥. 2010. “촛불 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 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33-59.
- 김준석. 2014. “유권자와 연방의원의 분석을 통해 본 티파티 운동, 2010-2013: 유권자 지지의 변화와 의원모임 이념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권 2호: 131-164.
- 김진하. 2004. “소득 수준에 따른 계급 투표의 부활: 미국 대신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465-493.
- 마인섭. 2004.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적 정착.”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31-39.
- 서현진. 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집 4호, 269-293.
- 유성진. 2012. “오바마 이후 미국의회, 양극화는 완화되었나?” 『한국정당학회보』 11권 3호: 187-211.
- 유성진 · 정진민. 2011. “티파티 운동과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미국정치연구회 편, 『미국의 선거와 또 다른 변화: 2010년 중간선거』. 서울: 오름.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 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권 2호: 251-287.
- 장 훈. 2004. “한국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과제: 진보-자유지상주의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의 압축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정진민. 2003.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95-118.
- 정진민. 2013. “정당 분극화의 심화와 2012년 미국 대선.” 미국정치연구회 편, 『어게인 오바마: 2012 미국 대선과 오바마의 재선』. 서울: 오름.

- 정진민 · 손병권 · 광진영. 2005. “사회적 이슈와 미국 정당 재편성.” 미국정치연구회 편,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 부시 재집권과 미국의 분열』. 서울: 오름.
- 조성대. 2007. “양극화 시대 미국정치의 이념적 재편성과 대중의 정당일체감: 1972~2004년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집 4호: 193-213.
- 조성대. 2015. 『이념의 정치와 한국의 선거: 공간이론으로 본 한국의 대통령선거』. 서울: 오름.
- 최준영. 2007. “공화당의 남북전략과 남북의 정치적 변화.” 『신아세아』 14권 3호: 154-177.
- Abramowitz, Alan, and Kyle Saunders, 1998.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Journal of Politics* 60: 634-652.
- Adams, Greg D. 1997. "Evidence of an Issue Evolu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718-737.
- Aldrich, John H. 1983. "A Downsian Model with Party Activ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4: 974-990.
-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cumulative data, release version 20150514.
- Bailey, Michael, Jonathan Mummolo and Hans Noel. 2012. "Tea Party Influence: A Story of Activists and Eli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published online 25 June. DOI: 10.1177/1532673X11435150.
- Bawn, Kathleen, Martim Cohen, David Karol, Seth Masket, Hans Noel, and John Zaller. 2012. "A Theory of Political Parties: Groups, Policy Demands and Nominations in American Politics." *Perspectives on Politics* 10-3: 571-597.
- Brambor, Thomas and William Roberts Clark. 2006. "Understanding Interaction Models: Improving Empirical Analyses." *Political Analysis* 14: 63-82.
- Campbell, James E. 2006. "Party Systems and Realignment in the United States, 1868-2004." *Social Science History* 30-3: 359-386.
- Carmines, Edward G., and James A. Stimson. 1989.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Feinstein, Brain D., and Eric Schickler. 2008. "Platforms and Partners: The Civil Rights

- Realignment Reconsidered.”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22: 1-31.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Samuel Abrams, and Jeremy C. Pope. 2004.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 New York: Person Longman.
- Gibbs, Nancy. 2004. "The Morning After." *Time* (11/01).
- Giillon, Daniel, Johathan Ladd, and Marc Meredith. 2014. "Education, Party Polarization and the Origins of the Partisan Gender Gap."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
- Hetherington, Marc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619-631.
- Hout, Michael, Clem Brooks and Jeff Manza. 1995.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the United States, 1948-1992." *American Sociology Review* 60-6: 805-828.
- Hout, Michael, Jeff Manza and Blem Brooks. 1999. "Class, Union, and Realignment of US Presidential Voting, 1952-1992." In Geoffrey Evans (ed), *The End of Class Politics? Class Voting in Comparative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3-96.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 Karol, David. 2009. *Party Position Change in American Politics: Coalition Manag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ol, David. 2012. "How Does Party Position Change Happen? The Case of Gay Rights in the U.S, Congress." Th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SA in New Orleans, LA.
- Key, V. O. Jr. 1959. "Secular Realignment and the Party System." *Journal of Politics* 21-2: 198-210.
- Layman, Geoffrey, and Thomas Carsey. 2002. "Party Polarization and Conflict Extension in the American Electorat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786-802.
- Layman, Geoffrey, Thomas Carsey, John Green, Richard Herrera, and Rosalyn Cooperman.

2010. "Activists and Conflict Extension in American Party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2: 324-346.
- Miller, Gary and Norman. Schofield. 2003. "Activists and Partisan Realign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7-2: 245-260.
- Miller, Gary, and Norma Schofield. 2008. "The Transformation of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Coalitions in the U.S." *Perspectives on Politics* 6-3: 433-450.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Issue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93-121.
- Schattschneider, E.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Fort Worth: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Schofield, Norman, and Gary Miller. 2007. "Elections and Activist Coalition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 518-531.
- Schofield, Norman, Gary Miller, and Andrew Martin. 2003. "Critical Elections and Political Realignments in the USA: 1860-2000." *Political Studies* 51: 217-240.
- Shafer, Bryon, E. and William J. M. Claggett. 1995. *The Two Majorities: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tonecash, Jeffrey M. 2006. *Political Parties Matter: Realignment and the Return of Partisan Voting*.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 Sundquist, James. 198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Brookings Institution.
- Zaller, John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투고일: 2017.09.25. 심사일: 2017.11.27. 게재확정일: 2017.11.27.

Activism and Issue Evolution: The Polarization of the US Politics since the 1990s

Sungdai Cho |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artisan polarization of the U. S. politics since the 1990s, focusing on the conflict displacement vs. conflict extension hypotheses with the policy influence of party activists. It gives an empirical test of whether the social-cultural issue dimension displaces the New Deal class cleavage of the 1930s with the enlargement of conflict scope provided by social and cultural issues from the 1980s. In addition, it also analyzes important questions of whether the role of partisan activists in the process of issue evolution and their influence on the mass party identification and their vote choices.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y find the economic-welfare conflict dimension has already developed in the 1970s with ideological alignment with mass partisanship and continues throughout the 2010s. In contrast, the social-cultural issue dimension aligned with mass ideology from the 1980s under the guidance of partisan activists and has contributed to conflict extension and to the partisan polarization. Results also show that partisan activism has revealed an comparatively extreme policy stance and influenced on mass partisan orientation and vote choice. In particular, the political activism on social-cultural dimension has played an active role in polarizing the partisan politics in the U.S.

Key Words | American Politics, Polarization, Conflict Displacement, Conflict Extension, Party Activism